

세계 10번째 '우주 강국'... 두번 실패는 없다

마무리 단계 총점검 돌입... 페어링 분리 완벽 보완

나로호 2차 발사 D-4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 2차 발사가 닉스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대감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인공위성을 자국에서 쏘아 올린 세계 10번째 나라가 될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원장 이주진)은 지난 3일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정부 차원의 종합점검을 수행, 발사준비 마무리 단계인 나로호 총점검 및 발사운용 사전 준비 상황 점검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나로호(KSLV-I : Korea Space Launch Vehicle-I) 발사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한국 최초로 시도되는 시험발사 프로젝트다.

항우연은 지난해 8월 25일 1차 발사에 이어 이번 2차 발사에서도 100kg급의 과학기술위성 2호를 나로호에 실어 최저 300km, 최고 1500km의 지구 저궤도에 쏘아 올릴 계획이다. 오는 9월 2차 발사에서는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인 페어링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를 최대의 관심사다. 1차 발사에서 나로호는 정상적으로 이륙한 후 1단 추진 비행에는 성공했지만, 상단부 페어링 한쪽이 분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위성의 자세제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후 1·2단 분리, 2단 킥모터 연소, 위성 분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탑재된 과학기술위성 2호는



궤도 진입에 필요한 속도(초속 8km)를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2단과 위성 모두 목표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대기권으로 돌입해 소멸한 것으로 추정됐다.

2차 발사 성공을 위해 항우연은 페어링 분리기구의 불완전 작동 문제를 개선하는 데 최대의 역점을 뒀다. 나로호 발사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전기 배선 장치의 방전으로 이륙 216초에 분리화약이 폭발하지 않았거나 페어링 분리기구의 불완전 작동으로 기계적 결함 등 두 가지 가능성이 파악됐다.

이후 항우연은 페어링 분리 구동장치와 화약장치를 연결하는 케이블과 케이블 연결기

로 기존 제품보다 방전 방지 효과가 큰 제품을 사용했다. 이뿐만 아니라 페어링 분리 구동장치와 화약 기폭장치 연결 케이블의 연결 부위를 몰딩 처리함으로써 보안했다. 또 한쪽 페어링 구동장치에서 문제점 발생 시 정상 작동하는 다른 한쪽에 의해 분리 화약이 기폭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양쪽 페어링 기폭회로를 보완했다고 항우연은 전했다.

앞서 지난달 상단과 1단의 조립을 완료한 나로호는 그동안 각종 연계시험과 전기 점검 등을 수행했고 '태극기'와 '대한민국' 등의 로고 부착과 배터리 충전 등을 완료했다. 발사대로 이송하기 위한 준비는 4일 중 마무

리 됐다. 이와 함께 나로호와의 연계 시험과 2차 발사에 필요한 추진제 및 각각 고압가스 충전을 마친 나로우주센터의 발사대 시스템은 발사 당일까지 최적 상태로 유지된다. 이후 발사 사흘 전인 6일 한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의 발사준비 협동 확인을 거쳐 나로호는 발사 이를 전부터 발사대로 이송돼 접속을 시작하는 밤운용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이어 발사 하루 전 '발사 리허설'을 거쳐 기상조건이 충족되면 9일 오후 5시를 전후해 발사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강운태 당선자 "4대강 중단해야"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강 당선자는 4일 "보를 설치하고 준설을 하는 지금 같은 방식의 4대강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며 "영산강은 개발보다는 수질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당선자는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오수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수관과 시설을 늘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며 "4대강 사업 예산이 수질개선 사업에 쓰이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강 당선자는 "지난해 12월 광주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다"며 "선(先) 영산강 수질개선, 후(後) 영산강 개발 입장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맹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영산강은 식수원으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수질이 좋지 않다"며 "영산강 수질 오염의 거점인 광주지역 내 오수분리사업, 광주천 정비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총 사업비 2조7000억 원)은 광주·전남에서 총 10개 공구로 나눠 진행되는 가운데 광주는 6·7공구가 해당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1분기 성장률 8%... 7년 만에 최고치

1분기 경제성장률이 7년3개월 만에 8%대로 진입했다. 또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기자 효과의 영향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분기 경기가 예상보다 호전됨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작년 동기보다 8.1% 증가했다.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속보치에 비해 0.3%포인트 높아졌다.

인트 상향된 것으로, 2002년 4분기 8.1% 이후 7년3개월 만에 8%를 넘었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도 2.1%로 속보치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정영택 국무계정실장은 "3월 생산활동지수를 반영하면서 전분기 대비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속보치보다 0.6%포인트 상향됐으며 건설업과 운수·보관업도 각각 0.3%포인트와 1.0%포인트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보성 다도락 다원 녹차 '올해 名茶' 대상

대한민국 올해의 명차(名茶) 품평회에서 보성 다도락 다원의 녹차(시진)가 발효차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4일 보성 지역 녹차생산자 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올해의 명차 품평회에서 보성 다도락 다원의 발효차인 '유정금당'이 효소성 강발효차 부문에서 대상인 '봉상'을 수상했다.

다도락 다원의 발효차는 차맛과 향기

등에서 다른 발효차들에 비해 고른 품질로 맛과 향이 뛰어나다는 인정을 받았다. 다도락 다원은 최근 열린 보성다향제에서 최고상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일본의 세계녹차콘테스트에서 금상을 받기도 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정부 '천안함 사건' 유엔안보리 공식 회부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회부됐다.

정부는 4일 오전 11시(뉴욕 현지시간) 주유엔대표부 대사 명의로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국(멕시코)에 제출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정부는 서한에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이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명백히 드러났다"며 "북한의 무력 공격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유엔 안보리가 이번 사건을 논의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엄중하게 대응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교원평가제'... 이달중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올해 3월 전면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에서 핵심인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이달 하순부터 일선 학교에서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교원평가제를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6월 한 달간 일선 학교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고 밝혔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근평)과 달리 교원평가제에만 포함된 것이다.

교원평가제는 동료 교사에 의한 평가와

점수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다. 조사 주기는 연 1회이며, 학교별로 시행 일정이 다르지만 1학기 말 기준으로 해당 학생을 맡고 있는 담임 및 교과 교사, 교장·교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준비 상황에 따라 6월부터 9월 사이에 조사를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원평가방법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 단계 척도의 절대 평가방식이며 서술형 응답을 병행한다. /연합뉴스

日만정

- 김종우

지방선거 당선자 평균 모습 '40~50대 대졸 男'

10.9% 군미필·전과자 399명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당선인 통계에 나타난 6·2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평균 모습은?

선관위가 광역단체장 16명을 포함해 3천991명의 당선자 신상내역을 분석한 결과, 학력은 대졸(졸업, 재학, 수료, 사회·퇴학 포함)이 절반을 차지했고, 연령은 40~50대가 78.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성·연령·정당별 = 전체 당선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81.3%(3244명), 여성이 18.7%(747명)였다. 여성 당선자 비율은 2006년 지방선거(13.7%) 대비 소폭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의 44.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대(34.4%), 60세 이상(16.3%), 30대(4.9%), 30세 미만(0.3%) 순이었다.

◇ 직업·학력별 = 직업별로는 지방의원 출신이 8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치인(862명), 농축산업

(283명), 상업(218명), 건설업(112명), 회사원(108명), 공무원(90명), 교육자(84명)가 뒤를 이었다. 무직으로 기재한 당선자도 131명이나 됐다. 변호사(4명), 언론인(5명), 의사·약사(20명) 등 전문직은 소수에 그쳤다. 학력별로는 대졸(졸업·재학·수료·퇴학 포함)이 50.6%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졸(졸업·재학·수료) 28.1%, 고졸(졸업·퇴학) 13.8%, 중졸(졸업·퇴학) 4.7% 순이었다.

◇ 병역·전과 = 남성 당선자 가운데 군미필자는 10.9%(437명)에 달했다. 각급 선거별 병역 미필자는 광역단체장 7명, 기초단체장 35명, 광역의원 91명, 기초의원 294명, 교육감 1명, 교육의원 13명이었다. 전과기록을 보유한 당선자는 399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9.8%를 차지했다. 기초의원이 28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광역의원 91명, 기초단체장 20명, 광역단체장 6명, 교육의원 2명 순이었다.

◇ 직업·학력별 = 직업별로는 지방의원 출신이 8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치인(862명), 농축산업

(283명), 상업(218명), 건설업(112명), 회사원(108명), 공무원(90명), 교육자(84명)가 뒤를 이었다. 무직으로 기재한 당선자도 131명이나 됐다. 변호사(4명), 언론인(5명), 의사·약사(20명) 등 전문직은 소수에 그쳤다. 학력별로는 대졸(졸업·재학·수료·퇴학 포함)이 50.6%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졸(졸업·재학·수료) 28.1%, 고졸(졸업·퇴학) 13.8%, 중졸(졸업·퇴학) 4.7% 순이었다.

◇ 병역·전과 = 남성 당선자 가운데 군미필자는 10.9%(437명)에 달했다. 각급 선거별 병역 미필자는 광역단체장 7명, 기초단체장 35명, 광역의원 91명, 기초의원 294명, 교육감 1명, 교육의원 13명이었다. 전과기록을 보유한 당선자는 399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9.8%를 차지했다. 기초의원이 28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광역의원 91명, 기초단체장 20명, 광역단체장 6명, 교육의원 2명 순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쪼인트' 또 깨지게 생겼다

시설

선거 후유증 털고 이젠 지역경제 쟁길 때다

전국을 내내 달구었던 선거는 끝났다. 이제는 정치 과정의 열기에서 벗어나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신발끈을 고쳐 매야 할 때다.

지방선거를 끝낸 지금 지역경제의 현실은 암울하다. 산업기반이 빈약한 지역경제를 받치고 있던 건설업은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돼 있는 골목상권은 대형유통업체의 무차별적인 진입으로 설 자리마저 잃고 있다.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 금융기관의 자금줄 옥죄기 등이 종종, 삼중고에 시달리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국내외 경제마저도 천안함 침몰, 유럽발 재정위기, 금융시장 불안 등 안정화를 해칠 수 있는 요소들이 뒤범벅된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이는

지역경제 회생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계 분명하다. 대내외적으로 흔든 그림자 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신발끈을 고쳐 매야 할 때다.

이번 선거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가 최대 화두였다. 당선된 풀뿌리 일꾼 중에 누구도 지역경제를 소홀히 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없다. 당선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지역민들에게 약속했듯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전력해야 한다. 일자리 및 새 성장동력 창출, 기업유치, 중소·중견기업 활성화, 건설업 및 골목상권 회생 등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지금은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특히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의를 살펴 지역경제 회생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6·2 선거사법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이번 6·2 지방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 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진흙탕 싸움'의 연속이었다. 교육감과 교육위원까지 포함한 과열 선거전에 따라 금품과 향응 접대, 흑색선전이 난무한데다 소지역주의자 가세해 극심한 불·탈법 양상을 보였다.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과정에서 선거사법 1112명을 단속해 10명을 구속하고 180명 불구속입건에, 562명은 수사 중이며 360명을 내사종결했다고 한다. 광주와 전남도선관위도 700건을 적발해 79건을 고발하고 44건 수사의뢰, 548건 경고 조치, 29건은 수사당국에 이첩했다는 것이다.

선거사법 처리가 늦어지면 그로 인한 선거유지는 만만치 않다. 현재 기초단체장 당선